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9

재정 INSIGHT
통계로 보는 2025년 예산안
재정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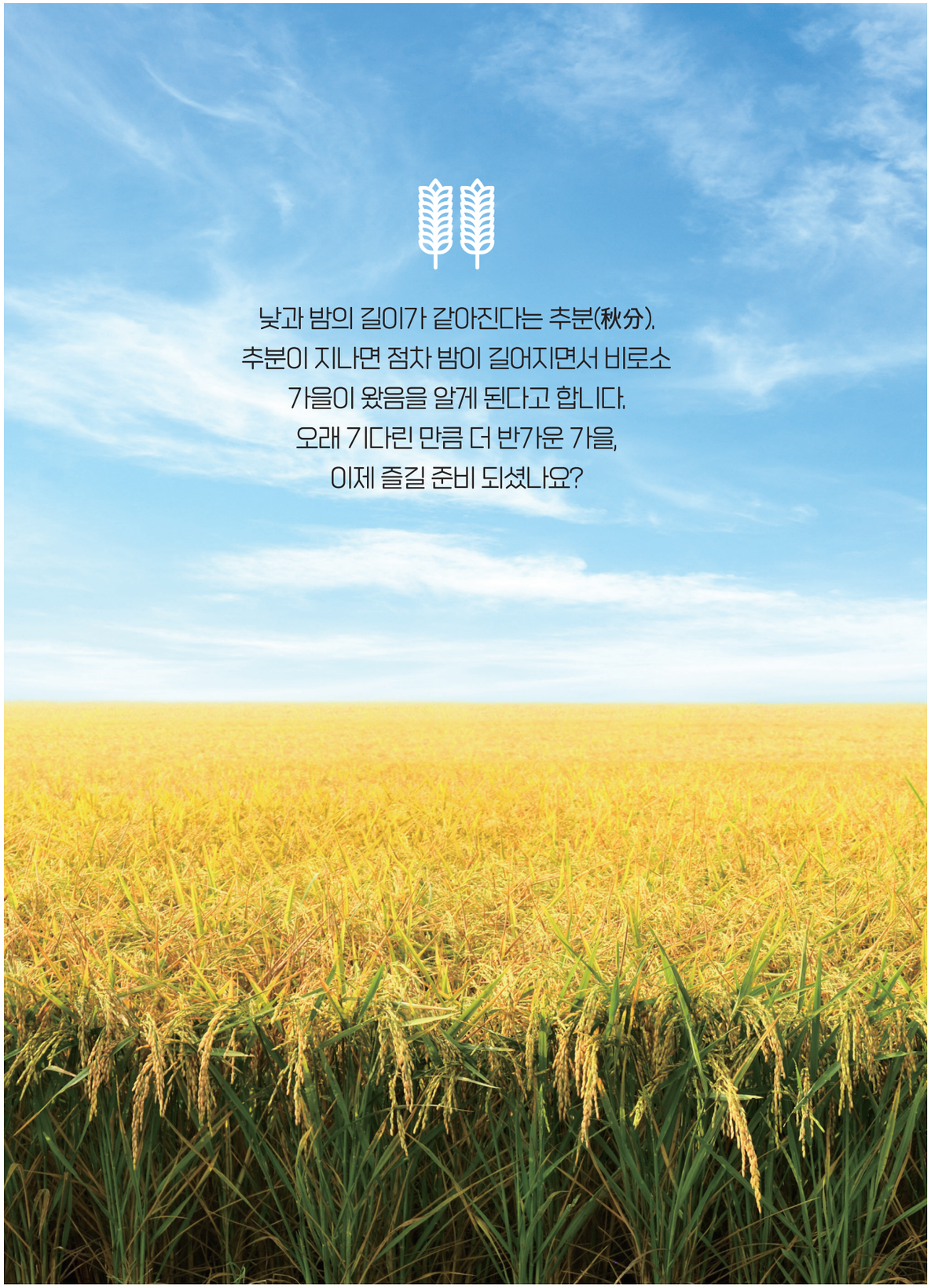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
재정, 그땐 그랬지



2024 September
Vol.93

FIS 한국재정정보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秋分).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면서 비로소
가을이 왔음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더 반가운 가을,
이제 즐길 준비 되셨나요?

CONTENTS







재정 INSIGHT

04 통계로 보는 2025년 예산안

06 재정 칼럼

2025년도 예산안의 심의와 사회적 책임
-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2025년 정부예산 편성 방향과 특징: 전략적 경쟁시대, 똑똑한 정부가 되기
- 윤지웅 경희대 교수, 한국정책학회장

2025 세입예산안과 세법개정안상 쟁점사안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법학회장(차기)

24 재정 FOCUS

2025년 예산안

재정 NOW

28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30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재정 STORY

38 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

정부지출은 왜 증가하는가?
- 옥동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46 재정, 그땐 그랬지

민자유치제도 30년의 명암
- 배국환 전)기획재정부 제2차관

50 일상 속 경제·재정 이야기

엔비디아 젠슨 황에게 배우는 회복탄력성
- 조원경 UNIST 교수

54 문화로 보는 재정 이야기

56 재정 캘린더

58 애독자 코너

월간 나라재정
2024 SEPTEMBER VOL. 93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센터 | 02-6908-8157

통계로 보는 2025년 예산안

2025년 예산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발표되어,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4대 투자 중점을 설정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 약자복지 강화,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보 강화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2025년 예산안에 담긴 우리나라 재정총량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재정수입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6.5%(39.6조 원) 증가한 651.8조 원 규모이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와 내년 대내외 여건의 완만한 회복 흐름에 힘입어 국세 수입이 2024년도 예산 367.3조 원보다 15.1조 원 증가한 382.4조 원인 것으로 예측한 데 따른 것이다. 재정수입의 또다른 원천인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 예산 244.9조 원 대비 24.5조 원 증가한 269.4조 원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출은 677.4조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2%(20.8조 원) 증가한 규모이다. 지출 성격별로 살펴보면, 의무지출이 365.6조 원으로 54.0%, 재량지출이 311.8조 원으로 46%를 차지한다. 의무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18.2조 원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급액 증가 및 약자복지 강화에 따른 복지분야 법정지출 증가, 국가채무 확대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에 기인한다.

〈2025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규모〉

(단위: 조 원)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액(C=B-A)	증감률,%(D=C/A)
총수입	**612.2**	**651.8**	**39.6**	**6.5**
국세수입	367.3	382.4	15.1	4.1
세외수입	244.9	269.4	24.5	10.0
총지출	**656.6**	**677.4**	**20.8**	**3.2**
의무지출	347.4	365.6	18.2	5.2
(비중)	52.9%	54.0%	-	-
재량지출	309.2	311.8	2.6	0.8
(비중)	47.1%	46.0%	-	-

재정수지는 적자를 이어갈 전망이나, 그 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상 통합재정수지는 25.6조 원 적자로 GDP 대비 -1.0% 규모로 전망했다. 이는 2024년 예산에 비해 18.8조원 감소하여 GDP 대비 규모로도 0.8%p 적어진 수치이다. 또한, 관리재정수지를 2024년 -3.6%에서 2025년 -2.9%로 관리하여 적자 폭을 개선하면서, 정부는 재정수지 개선과 채무 증가 폭 억제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1,277.0조 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81.3조 원 증가한 수준이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예상되며, 2028년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50%를 넘어선 바 있으나, 금년 GDP 계열변경으로 인해 다시 50% 안쪽으로 개선되었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단위: 조 원)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B-A)
통합재정수지	△44.4	△25.6	+18.8
(GDP 대비 비중)	(△1.8%)	(△1.0%)	(+0.8%p)
관리재정수지	△91.6	△77.7	+13.9
(GDP 대비 비중)	(△3.6%)	(△2.9%)	(+0.7%p)
국가채무	1,195.8	1,277.0	+81.3
(GDP 대비 비중)	(47.4%)	(48.3%)	(+0.8%p)

12대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증가율이 큰 분야로는 R&D 분야(11.8%), 보건·복지·고용 분야(4.8%), 환경 분야(4.0%)순으로 해당 분야의 예산 증가 폭이 총지출 증가율(3.2%)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5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사회·경제·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교육·돌봄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농어업 미래성장산업화 등을 통해 경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행정 분야에서는 국민 안전, 국방, 외교·안보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뒷받침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2025년도 예산안의 심의와 사회적 책임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들어가며

2025년도 예산안이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되고 9월 2일 국회로 송부되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편성방향이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하면서,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확산, 미래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 · 글로벌 중추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설명이다.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이를 위해서 재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비효율적 사업은 줄이고, 다부처 협업예산 편성을 장려하여 관리재정수지를 GDP대비 -2.9%로 축소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코로나위기 극복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관리재정수지를 GDP대비 3%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처음으로 예산편성단계에게 이행한 것으로, 2%대의 재정적자는 2019년 이후 처음 만나는 것이기에 정부의 이 같은 건전재정을 위한 이행노력은 무더위의 끝에 만난 한 줄기 가을바람같이 반갑게 느껴진다.

예산안 편성방향의 제시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보인다. 정부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부족한 부분인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먼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인 과제들을 제시하고 이들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 예산안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사회의 시대적인 과제들로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온실가스증가로 인한 기후위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등의 양극화, 성장동력의 약화로 인한 저성장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방향에 있어서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들 중에서 사회적인 수요에 의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해 연도에 중점을 두는 과제들을 제시한 다음 이들 과제들과 관련된 예산은 기본적인 예산안의 분류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총지출의 경우는 지난해 보다 20.8조 원 증가한 677.4조 원인데,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생 복지 예산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고용분야의 비중이 36.8%로 역대 최대에 달한다. 증가폭 20.8조 원의 절반 이상인 11.4조 원도 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지난해 논란이 컸던 R&D분야 예산은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11.8% 증가하였고, 사회기반시설(SOC)분야 투자는 12대분야 중 유일하게 2024년 예산보다 감소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정부의 분야별 예산편성비중에 대한 공감대형성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재정투입으로 인한 분야별 공공서비스의 절대적 및 상대적인 공급수준을 사회적 수요대비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 체계적인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지난해 일어났던 R&D예산감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한 혼란과 금년 SOC예산의 감축에 대한 지역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야별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수결손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20조 원 이상 대규모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국회예산안심의과정을 돌이켜보면 예산안이 국민들이 기대하고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향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를 거쳐서 보완된 다음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합의를 통해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예산안의 규모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서 계속 증가한 반면에 9월 2일에 제출되어 12월 2일까지

3개월 정도 이루어지는 예산안의 심의기간 및 50명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그 동안 제대로 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그 동안의 심의관행과 22대 국회개원이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고려해 볼 때 기한 내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물론 그 동안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정책처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 정부의 예산 및 정책에 대한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늘어나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상설화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사회적책임에 걸 맞는 수준의 예산안심의과정 및 결과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내실있는 예산안의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기간동안 예산안의 편성시에 정부가 제시한 투자중점분야인 약자복지, 경제활력 등과 시대적인 과제인 기후위기, 인구위기, 양극화 등과 관련된 예산안의 적절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성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우리사회의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상임위원회별로 일정기간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국회는 부족한 객관적인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학회는 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해서 축적된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주요 사업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는 국가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하도록 유지 및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경제는 눈부신 성장으로 지속가능성 기반을 다져 왔으나, 공동체로서의 질적인 성장에는 과연 얼마나 신경 써 왔는지를 돌아볼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이러한 재정운용의 목표를 균형있게 추구해 나갈 것인가를 예산안의 주요사업과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는 '25년 명목경제성장률을 실질 2.2%, 물가상승률 2.4%를 합한 4.6%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기 평균도 이와 유사한 4.5%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미래를 위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의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와 이공계 석·박사 양성에도 이번 예산안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 결속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을 통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특별히 사회 최빈층과 약자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재정은 기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예산안이 기초생활보장 확대에 20.8조 원 중 적지 않은 1.1조 원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였다는 점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또한 소득 최하 20%인 1분위가 5년간 같은 계층에 머무르는 경우가 증가하였다는 문제의식 하에, 정부는 자활성공금을 신설하는 등 계층이동성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고안해낸 한편 저소득층이 많은 노인 대상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0만 개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양육과정, 그리고 사회 진입시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우리 사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데에 중요한 사안이다. 예산안은 이에 연관된 사업으로서 만18세까지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미혼모, 베이비박스 등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해서 저출생 시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타지에서 공부하는 20~30대 청년 지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고, 국가장학금을 대학생의 75%가 수혜할 수 있도록 9분위까지 확대해서 연간 4.7조 원 규모에서 5.3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구직 창업 청년을 위해 청년자립자금과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의 매칭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 또한 그간 이뤄온 양적 성장의 부산물로서 꾸준히 해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인데, 이의 해결을 위한 증액이나 신규투자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면 이번 예산안에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쉽다.
정부의 주요사업을 살펴본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한다면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먼저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이 이루어지고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각각의 경우에 합리적인 근거제시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성과제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집행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전년도의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는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현재는 500억 이상의 사업에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규모에 관계없이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인 보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조세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의 경우도 전년도의 결산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시에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노력과 아울러 저출생관련 사업 등 동일한 목적으로 부처간에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간의 연계 및 조정을 통한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국가라는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인구와 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는 감소추세로 국가채무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두 요소 모두 변화속도가 가파르다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적자성 채무가 곧 1,000조 원을 넘어 설 전망인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와 같이 미래의 조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2027년 1,000조 원을 넘어서고 비중도 7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준칙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전체적인 국가채무 규모는 GDP대비 50%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라지만, 이 또한 금년 GDP 계열변경으로 인한 영향도 작용한 것이어서, 채무의 양과 질이 동시에 빠르게 악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러한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조세정책기본계획과 예산안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심의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현황 및 전망

(단위: 조 원)

구분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
		예산	전망				
• 국가채무	1,126.8	1,195.8	1,195.1	1,277.0	1,353.9	1,432.5	1,512.0
◦ 적자성 채무 (비중, %)	726.4 (64.5)	792.3 (66.3)	802.0 (67.1)	883.4 (69.2)	955.0 (70.5)	1,024.2 (71.5)	1,092.7 (72.3)
◦ 금융성 채무[1] (비중, %)	400.3 (35.5)	403.5 (33.7)	393.0 (32.9)	393.6 (30.8)	398.9 (29.5)	408.3 (28.5)	419.3 (27.7)

1) '23년 금융성 채무에 해당하는 회계기금별 채무 대비 대응자산(금융자산) 부족분은 83.2조 원, 채무 대비 대응자산 초과 보유분은 105.0조 원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4~202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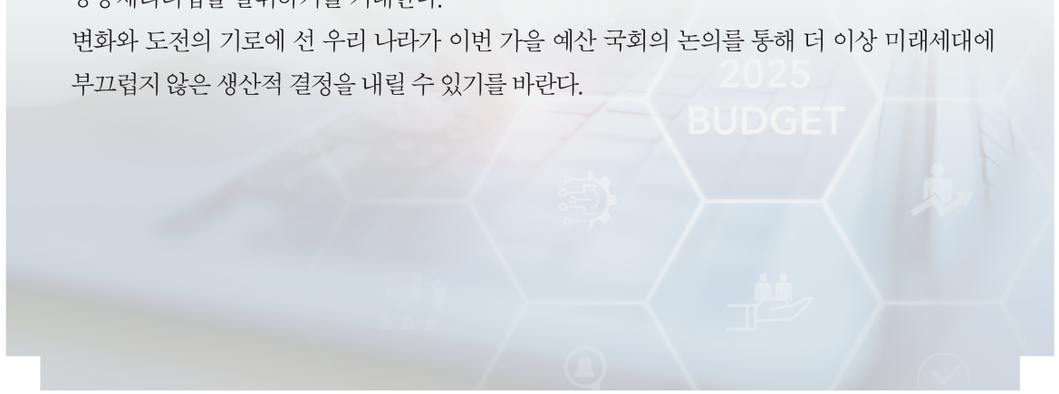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국가공동체의 영속을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 될 연금개혁안이다. 먼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민연금 지급액이 연평균 10.3%의 높은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안 발표 후 국민연금 기여율을 현재의 9%에서 13%까지 인상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부담률 상승은 분명 고통스럽고 회피하고 싶은 일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이라도 보장해주는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한시바삐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13%라는 수치가 일견 높아보이지만 이는 연금제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여율이며, 예견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미뤄온 결과 받아들인 성적표이기도 하다는 점을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통감할 필요가 있다.

맺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과제를 담고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단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며 꾸준한 재정 투자를 요구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출효율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명확한 원칙과 재정규율의 확립도 중요하다. 또한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재정운용의 원칙과 방향이 흔들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공동체유지의 핵심요소인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시대적인 과제를 파악하여 이를 재정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설정에 반영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제도적인 장치인 독립적인 재정거버넌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가공동체의 발전은 공동체의 발전에 필요한 시대적인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국민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창의적으로 진행하는 국가적인 리더십이 발휘되는 경우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안을 제출한 정부 및 심의하는 국회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시대적인 과제를 제대로 자각하고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내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국가적인 공동체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변화와 도전의 기로에 선 우리 나라가 이번 가을 예산 국회의 논의를 통해 더 이상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생산적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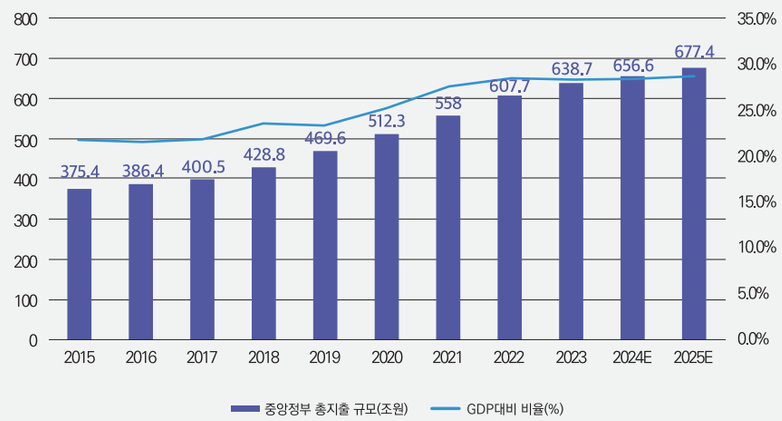
2025년 정부예산 편성 방향과 특징: 전략적 경쟁시대, 똑똑한 정부가 되기

윤지웅 경희대 교수, 한국정책학회장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총 677.4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예산 증가율(2.8%)보다 다소 늘긴 했어도, 3% 초반대로 묶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총예산을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로 보면, '15년 GDP 대비 약 21.7% 였던 정부예산이 '25년 약 28.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아직 GDP 대비 정부예산규모가 적다고 하지만, 복지와 의료분야에 대한 예산 규모 증가율 등은 급속히 늘어난 GDP 대비 정부예산규모를 보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평가된다.

[그림] 정부 재정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자료: e-나라지표 바탕으로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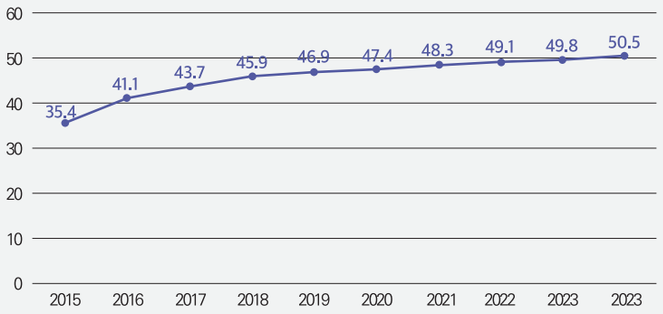
국민수요 중심의 예산편성 방향

정부는 예산편성의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잡았다. 첫째, 국민수요에 맞춘 재정지출이다.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민생과제에 대한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거사다리 구축, 취업 단계별 일자리 지원과 교육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둘째, 국제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에 중점을 둔 재정지출이다. 미래도전형 R&D 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 지원 등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또한 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 신유형 고강도 재해 및 범죄 대응 투자 확대를 담았다. 특히 지난해 급속히 줄였던 R&D에 대한 투자 회복이 눈에 띈다.

셋째, 재정운용혁신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다. 다부처사업의 유기적 연계, 재정전반의 누수와 낭비 최소화 등으로 지출효율화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당국은 '19년부터 급속히 증가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참고로, GDP 대비 국가 채무는 '17년 34.1%에서 '22년 45.9%로, 5년 만에 74.3%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25년에는 이를 48.3%로 낮추어서 향후 50%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중기재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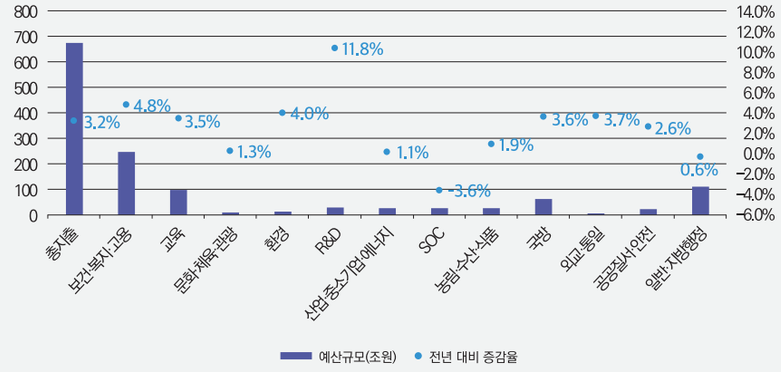
분야별 맞춤형 재원배분 추진

12대 재정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지난해 순삭감된 R&D 예산이 11.8%로 일정부분 회복되었고, 보건·복지·고용 4.8%, 환경 4%, 외교·통일 3.7%, 국방 3.6%, 교육 3.5% 순으로 총지출의 평균증가율을 상회하였다. 공공·질서·안전 2.6%, 농림·수산·식품 1.9%, 문화·체육·관광 1.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1%, 일반·지방행정 0.6% 순으로 증가하였다. SOC 분야의 경우 작년 예산 대비 약 9천억 원인 3.6% 순삭감이 이루어졌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재정당국이 앞서 언급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안을 설계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을 더욱 두텁게 하고자 연간 생계급여를 1인당 141만 원 인상하고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증가하는 등 약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나아가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된 자활성공지원금(최대 150만 원), 청년을 위한 저리 청년자립자금,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 등이 신설되었다.

[그림] 분야별 예산 배분 규모 및 증감율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경제활력 확산

경제활력을 확산하기 위한 예산으로 먼저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누적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조 원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배달·택배비(최대 30만 원 지원) 지원 등이 신설되었다. 매출신장을 위해 플랫폼 협업 촉진 차원에서 스토리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e-커머스사와 정부가 1:1로 매칭지원하는 TOPS프로그램과 상생성장지원자금이 신설되었다. 또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고, 폐업지원, 취업준비, 구직 등 단계별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였다.
신성장 임무형 R&D 강화를 통한 R&D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구체적으로 3대 게임체인저인 인공지능(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등), 바이오(난제해결 ARPA), 양자(양자 플래그십) 분야의 기술주권 확립과 신시장 선점을 위한 신규지원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또한 국민안전과 직결된 범죄 안전 분야와 범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한 R&D 또한 신규로 지원한다. 나아가 젊은 연구자들을 양성, 확보, 유지하기 위한 한국형 Stipend와 이공계 석사 장학금 등 신규로 마련된 사업들이 눈에 띈다.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또한 작년 2.6조 원에서 올해 2.9조 원으로 약 11.6% 증가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규지원사업들은 산업대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전산업 성장펀드, K-방산 수출펀드, K-콘텐츠 관련 펀드의 신규 조성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마련의 기틀이 될 것이다.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과 녹색전환보증금 공급 확대, 자원순환을 위한 폐배터리 활용체계에 대한 신규지원, 탄소발자국 측정 사업지원 등도 눈에 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업무부담 지원금 신설, 효과적인 돌봄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 신설, 주거 지원을 위한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 3만호 공급 등이 저출생 상황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것도 반길 일이다. 또한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을 위하여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교육시설 확충 지원 신설과 더불어, 달빛어린이병원의 2배 확대,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3배 이상 확대,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예산사업들이 마련되었다.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을 위한 지원도 다양한 차원에서 예산안이 마련되었다. 취업 자격증 특강 등 미취업졸업생 특화 사업이 신규로 지원되고,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규로 마련하였다. 또한 고독사 위험 청년에 대한 안부문자와 멘토링 사업이 운영된다.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인재, 지역산업, 교통혁신, 노후인프라 투자 등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예산안을 마련하였다.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지역 주택산업 중소기업 R&D를 신규지원한다. 또한 도심지 철도시설 지하화 추진 등 지역거점 도시철도 및 신공항에 투자할 예정이다. 노후 교량 터널 보수, 국도 병목구간개선 등 지역밀착형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외교

안전한 사회 구현 차원에서 먼저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전기차의 화재 대응 및 대비 관련 예산을 신규로 마련하고, 리튬배터리 관련 R&D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고위험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을 신설하였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한 지역단위 수해예방 인프라 구축 확대, 폭염예방설비 확대, 내진성능 평가 및 인증 확대, 지진관측망 확충 등 자연재해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되었다.

민생범죄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첨단 과학수사 관련 예산도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딥페이크 AI 영상·음성분석 관련 예산이 신규로 마련되었고, 해외 직구 제품의 위해성 탐지와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이 신규로 마련되어 기대가 크다. 또한 신속재판을 위한 전문감정인제도 신설과 사법부 AI 도입 예산 또한 마련되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2차 범죄피해 우려자 밀착경호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피해자 생계비 지원한도도 인상되었다.

전략적 외교와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25년 11월 APEC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탈북민 정착금 인상과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지원한다. 나아가 유무상 ODA를 연계하고, TIPS기업의 해외진출과 민간 금융기관 협력지원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였다.

전략적 경쟁시대에 똑똑한 정부지출을 기대하며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인도, 러시아 등의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미국의 RAND연구소(2022)는 경제 및 디지털 블록화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난제 해결은 전세계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 전략적 경쟁시대(A Era of Strategic Competition)가 도래하였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러-우전쟁으로 인해, 자유주의체제와 권위주의체제로 양분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세계화 시대의 이점을 누리면서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성공방정식이 전략적 경쟁시대에는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정책환경 변화에 정부는 제한된 예산을 똑똑하게 써야 할 상황이고, 2025년 예산안은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와 기술주권 확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의 확대는 시대전환에 대응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된다. 전략적 외교와 국제개발협력 예산의 확충도 시대전환을 고려했다고 본다. 또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다양한 차원의 양극화 심화, 지역소멸 등에 대응한 신규예산들도 국민안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인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다양한 무상자금지원 등과 같은 포퓰리즘적 재정사업들은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재정건전성과 경제안정화 기능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정부예산의 절대규모와 분야별 지원 비중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25 세입예산안과 세법개정안상 쟁점사안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법학회장(차기)



2025년 세입은 어떻게 될까?

2024년 예산안은 23년 12월 21일 656조 6천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는 법정시한(12월 2일)에서 19일을 넘긴 것으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 9천억 원)보다 약 3천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증액은 약 3조 9천억 원, 감액은 약 4조 2천억 원이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677.4조 원 규모이다. 총수입은 651.8조 원으로 올해 대비 6.5% 증가하였고, 총지출은 677.4조 원으로 올해 대비 3.2% 증가하였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올해 대비 4.1% 증가한 382.4조 원이었다. 제22대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의 세입예산안이 어느 것이 증액되고 또 감액될 것인가는 12월이 되어야 결론이 날 것이다.

세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던 작년에 비해 볼 때 올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여부, 상속세 개편에 대해 여야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세법개정안 전반적인 것을 살펴본다.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종전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국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 두 회의 모두 위원으로서 필자가 참석하기는 했지만, 주로 세입예산안과 관련한 세법개정안 관련해서는 국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국세분야의 경우 2022년에는 투자촉진·민생안정 지원 및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개편, 2023년에는 경제활력·민생안정 지원 지속, 인구 등 구조적 위기 극복 지원이 정부가 스스로 추진하였다고 밝힌 세법개정 핵심사항이다. 2022년에는 법인세율 인하, 2023년에는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이 세법개정시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개정으로 세수효과는 △43,515억 원이다. 2023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4,719억 원, 2022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13.1조 원이다. 위의 세수효과는 정부개정안의 단위표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2022년 세법개정안부터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감세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무 증가요인은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친환경차개별소비세 감면 재설계, 중소기업에서 부동산임대업 제외 등이고, 감소요인은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등 조정,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등이다. 상속세 개편으로 인한 자산가에 대한 감세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고, 정부가 제시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차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소득세법 제2장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등 관련)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개정안 역시 주식시세차익을 얻는 자산가에 대한 것이라 해서 이 역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 금융투자소득세도 문제가 있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당시부터 2년 유예해서 2023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정작 시행을 앞둔 시점에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서 소득세법을 또 개정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을 유예한 바 있다. 그런데 2022년 12월 소득세법이 다시 개정되어 추가적으로 2년을 연기해서 2025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 자체를 2025년에 시행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야당은 원래대로 2025년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연평균 9,808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되던 것이 과세가 되면 금융상품의 투자수익율이 떨어지면서 특히 주식시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다. 대만이 자본시장의 부정적 영향으로 시행 1년 만인 1990년 1월 1일을 기해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한 사례를 근거로 들기도 한다. 1989년부터 한국의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성공사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런데 일본은 1999년부터 증권의 매매 때마다 붙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였다. 한국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하려고 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인하는 일부 하지만 폐지는 못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하게 되면 세수입이 감소하고 외국인의 주식 매매에 따른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폐지를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증권거래세가 단타 매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근거로 들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 일본의 성공사례를 근거로 하면서도 일본과 다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이론적 가장 큰 근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조세원칙이라 할 수 있다.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으로 시세차익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소득과 달리 비과세하는 것은 이러한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는 1년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차익 등에 대해 수익 5,000만 원까지, 해외주식, 펀드의 이익 등에 대해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되어 0%로 적용된다. 기본공제금액부터 3억 원까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7.5% 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금융상품별로 공제액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다른 과세상 차별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이자 및 배당,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을 '자본투자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과세하는 것도 아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조세제도를 바꾼다고 하지만, 증권거래세와 함께 과세되는 이중과세문제, 금융상품별 차별문제, 배당소득과의 통합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완전한 제도는 아니다.

그런데 비과세되었던 것이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가 단기적으로 자본시장에 감당할 정도의 미미한 것이 될 것인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지원할 세제, 예컨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민할 때이다. 정치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의견과 원래대로 시행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수정론과 유예론이 절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 계속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정치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세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을 제시했다. 1997년 대비 물가가 2배가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는 2.2배, 수도권은 2.8배 상승한 상황에서 이러한 개편은 2000년도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오던 5단계 최고세율 50%의 상속세 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일본의 55% 다음으로 높은 나라이다. OECD의 상속세가 있는 나라의 평균 26% 비하면 두배에 가까운 세율이기는 하다. 실제 상속세 부담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도 들여다 보아야 하지만, 국가간 단순비교시 최고세율의 상징성을 볼 때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전향적인 변화이기는 하다.

최근 우리나라 부자들이 싱가포르 이민상담을 많이 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8년 2월 15일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했다. 상속세가 높다고 해서 심지어 상속세가 있다는 것만으로 국내 기반의 자산을 처분하고 국적이탈이 실제 얼마나 일어날지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2004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스웨덴의 경우 기업이민, 세금망명 같은 상황이 실제로 문제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이번 개편은 1999년 12월에 50억 초과시 45%의 상속세 세율을 30억 초과시 50% 세율로 과세하던 것과는 다른 방향의 개편이다. 당시 세율을 인상하는 개정은 고액재산가의 세부담이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개편이었다. 일본의 경우 2015년부터 50%의 세율을 55%로 인상할 때 자산재분배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개정이었다.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적정한 세부담을 고려한다면 세율 및 과표조정을 마지막으로 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상속세를 바꾸는 것은 세금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고 또한 세금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세율 및 과표조정으로 최고 구간의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오랫동안 손을 안 본 세제를 바꾼 불가피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하위 10% 세율 적용구간을 1억 원이하에서 2억 원이하로 변경하는 것은 주택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었던 몇 년전의 상황에서 보면 집 한 채 있는 가정에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완화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과표가 10억 초과하면 40%, 50% 적용을 받던 것이 40%가 되는데, 4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시 49.4%)을 적용받는 소득세 세율과 비교시 획기적인 개정이다. 상속받을 때 돈 벌 때보다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더 낮게 과세한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회원국 중, 스위스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대부분 소득세율보다 상속세율이 낮은데, 이번 개편으로 우리나라도 후자의 나라들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미국 조세재단 발표의 2023년 조세경쟁력지수에서 OECD 38개국 중 재산세 분야 32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속세 세율 인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만 최고세율을 10%나 인하시키는 것은 상속세 과세표준 30억을 초과하는 자산가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기에 상속세를 부의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금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지속적인 최근의 세수부족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여부는 세수효과의 측면보다는 상속세를 둘러싼 세금의 역할, 그리고 자산가에게 혜택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찬반이 갈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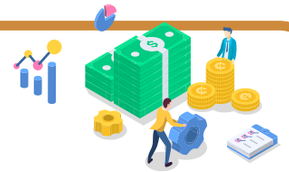
세법개정의 효과 고려 시 시차도 고려하여야 한다

세법개정과 이에 따라 세입에 미치기 까지 시차가 있다. 세금에 따라서는 2024년 12월 세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그 효과는 2026년의 세입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를 보면 2024년 12월에 법이 개정되면 2025년에 버는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고 원천징수나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2025년에 세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는 2026년에 하게 된다.

실제 예를 들면 2022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법인세법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세율 인하의 효과는 2024년에 나타나게 된다. 2024년 3월 국세수입은 26.9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6.0조 원 감소한 바 있는데, 법인세 납부실적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가 0.2조 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말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5.6조 원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법인세가 덜 걷힌 건 주요 기업들의 2023년 사업실적 부진 탓이었다. 2025년 세입은 2024년의 주요기업 사업실적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올해 세법개정의 효과를 2025년 세입과 연결지을 때 이러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세법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굵직한 쟁점들을 안고 있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기에 각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 경제 상황 변화도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경쟁력 있는 세제가 되도록 하는 것도 고민해 볼 부분이다.

2025년 예산안



기본 방향

01 민생과제 집중 투자



02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



03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 총량

총수입

’24예산 612.2조

39.6조 원 6.5%▲



651.8조

총지출

’24예산 656.6조

20.8조 원 3.2%▲



677.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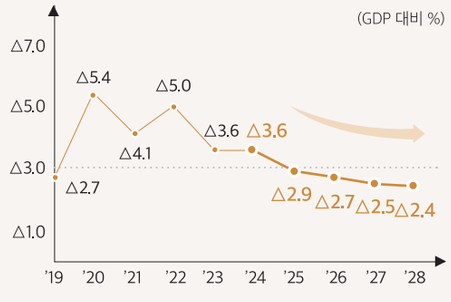
(전년대비)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25.6조 원	△77.7조 원	1,277조 원
0.8%p 개선	0.7%p 개선	0.8%p 증가

재정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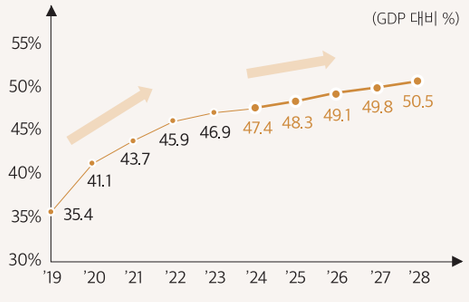
관리재정수지

’25년 이후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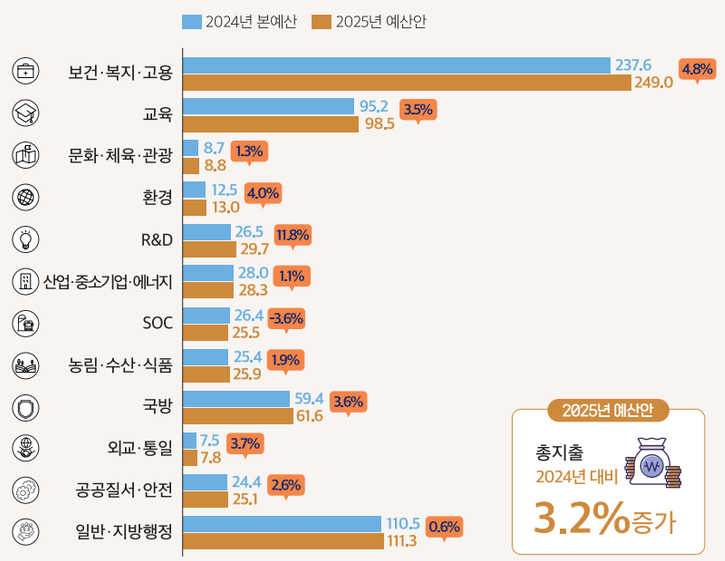


국가채무

’28년 50% 수준으로 안정적 관리



12대분야 재원배분



2025년 예산안
총지출 2024년 대비 3.2%증가

[보건복지고용] +3.2%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핵심 분야 집중 투자
*필수·지역의료 재정투자 확대

[교육] +3.5%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대학 협력체계 개편
*의대증원 관련 소요 포함 대학 지원 강화

[환경] +4.0%
*녹색경제 전환 촉진, 환경서비스 강화

[R&D] +11.8%
*3대 게임체인저·국가전략기술 중심 기술패권경쟁력 강화, 젊은 과학자 연구환경 조성

[SOC] -3.6%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및 노후 인프라 개선

[국방] +3.6%
*3축체계 고도화, 비대칭전력 확보
*군복무 처우개선, 군 의료 및 장비 보강

[외교통일] +3.7%
*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ODA 확대, 북한인권 개선

투자중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
- 노인·장애인·취약아동 맞춤형 보호
-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
-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과 문화 격차 해소

경제활력 확산



-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 농어민 소득 확충 및 농수산물 물가 안정
- 선도형 R&D 개혁과 첨단산업 육성
- 수출모멘텀 확산과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 일가정양립·돌봄·주거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 필수의료 확충·지역의료 복원
-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
- 인재·산업·교통 혁신으로 지방시대 뒷받침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 신유형·고강도 재해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
- 첨단·과학수사와 국민 권리 구제 강화
- 군 자긍심 고취와 강한 군대 육성
- 전략적 외교·ODA로 국익 창출

재정운용혁신

현장수요중심

국민목소리 반영
수요자 맞춤형 지원



다부처 협업

공동 기획·편성·집행
복잡한 문제 해결



지출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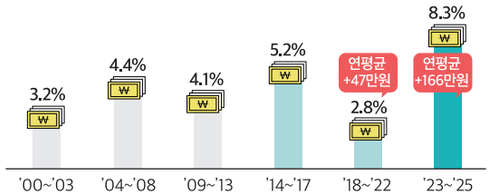
타당성·효과성 재점검
재정전반 비효율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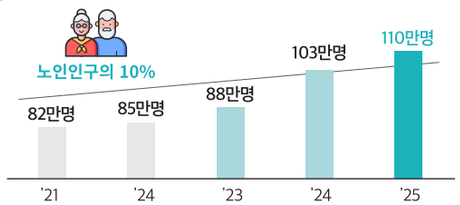
2025년 예산 20대 핵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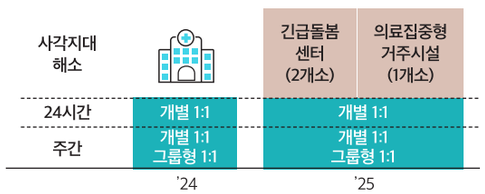
01 생계급여 최근 3년간 연평균 +166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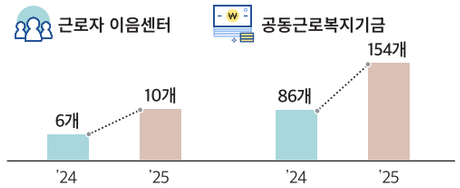
02 노인인구 10% 이상에 노인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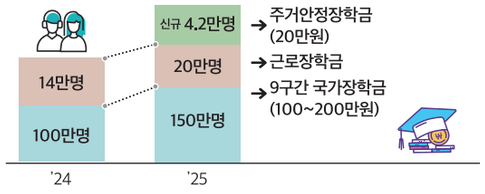
03 최중증 장애인 촘촘한 돌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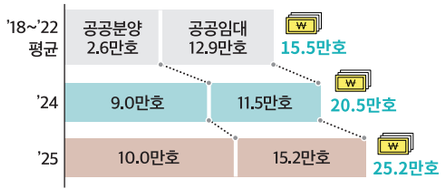
04 미조직 근로자 이음센터 6 → 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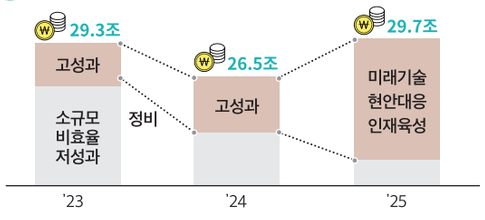
05 국가장학금 100 → 15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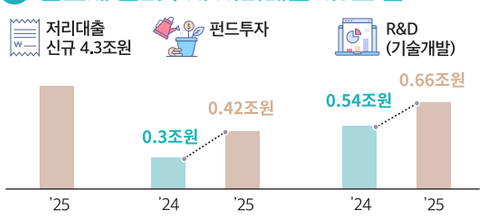
06 공공분양 임대 역대최대 25.2만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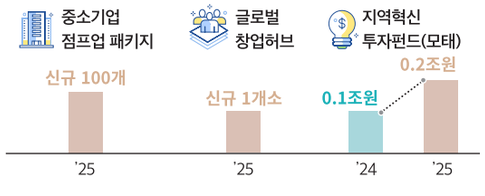
07 선도형 R&D투자 시스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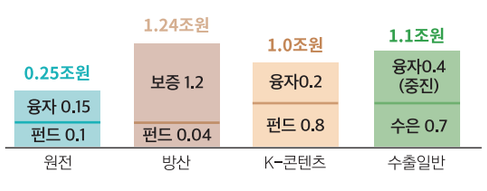
08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대출 4.3조 원



09 중소기업 점프업(1007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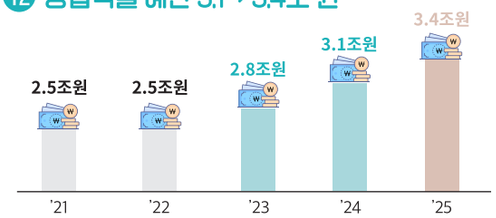
10 원전 · 방산 · K콘텐츠 등 수출금융 3.6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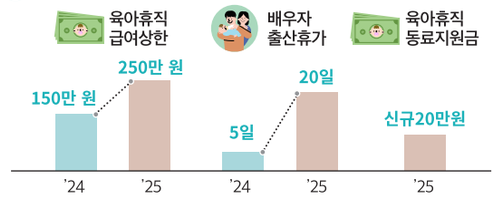
11 소상공원 특화취업 프로그램(최대 1,310만 원)

폐업	취업준비	구직
사업체컨설팅 (1.2만개)	사전교육수당 (60만원)	성공수당 (190만원)
점포철거비 (250→400만원)	심층교육수당 (월50~110만원, 최대6개월)	고용촉진장려금 (월30~60만원, 1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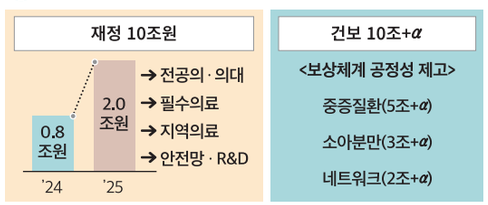
12 농업직불 예산 3.1 → 3.4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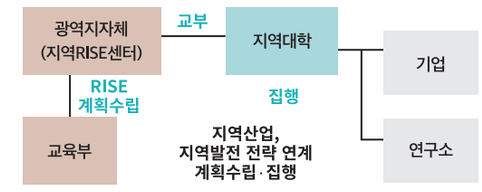
13 육아휴직 급여상한 월150 → 25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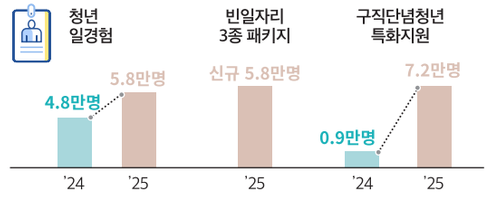
14 의료개혁 5년간 20조 원+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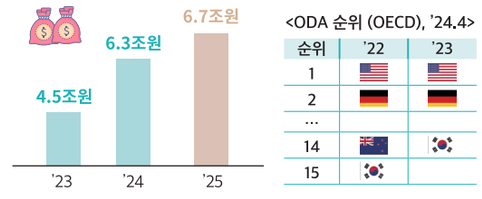
15 지자체 중심 대학지원RISE 시행(2,0조 원)



16 청년일자리 특화지원 5.7 → 18.8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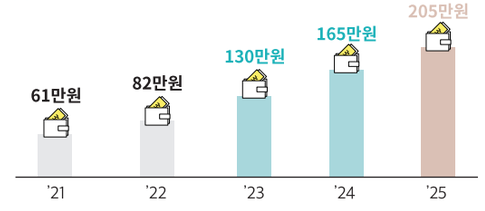
17 전략적 · 국익 ODA 확대(+0.4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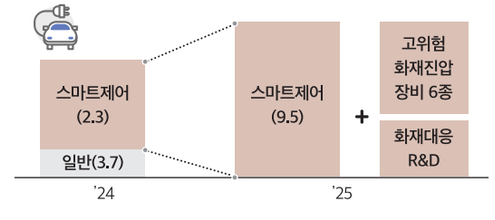
<ODA 순위 (OECD), '24.4>

순위	'22	'23
1		
2		
…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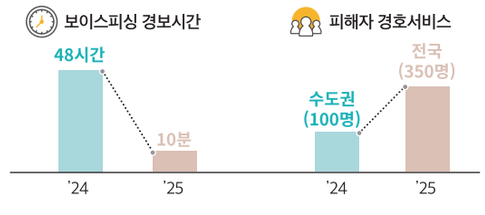
18 병봉급 약속이행 월 165 → 205만 원



19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2.3 → 9.5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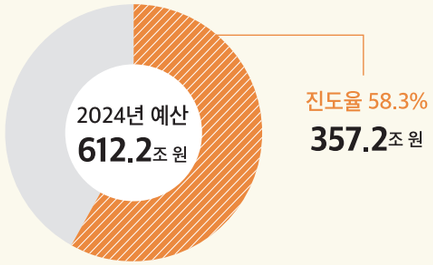
20 보이스피싱 경보 48시간 → 10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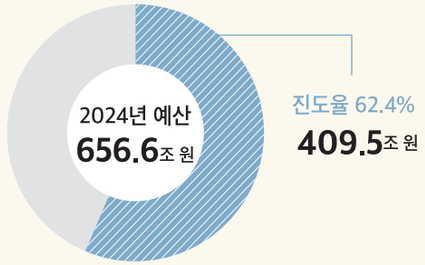
2024년 7월 기준 **재정동향**



총수입 **357.2조 원**



총지출 **409.5조 원**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52.3조 원 적자 (누적 기준)	83.2조 원 적자 (누적 기준)	1,159.3조 원 (누적 기준)

주: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예산 대비 당월 누계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9.

총수입 · 총지출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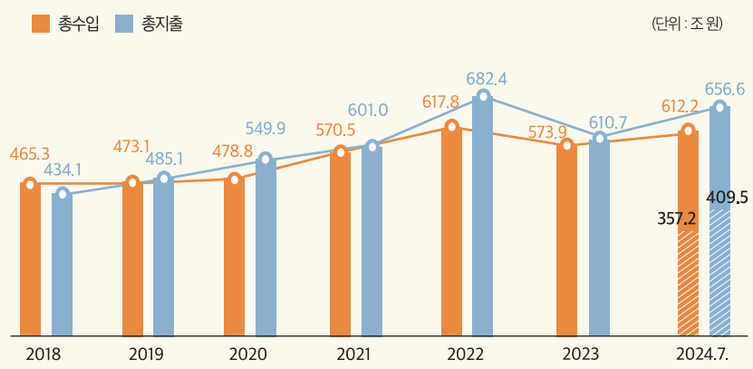
357.2조 원

전년 동기 대비 **+3.9조 원**

총지출

409.5조 원

전년 동기 대비 **+18.3조 원**



주: 2023년까지는 결산, 2024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52.3조 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14.5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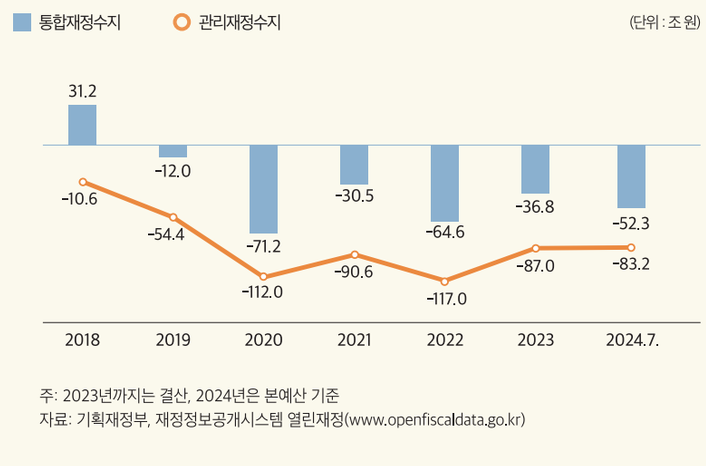
관리재정수지

83.2조 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15.3조 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0.8조 원 흑자



주: 2023년까지는 결산, 2024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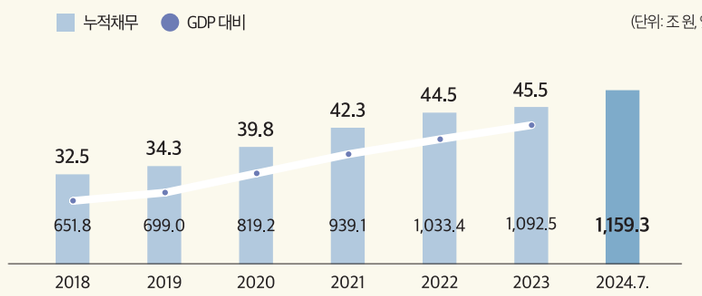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1,159.3조 원

전월 대비 **+13.4조 원**

전년 말 대비 **+66.8조 원**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은행 GDP 규모 확정 시 제공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해외재정동향

재정정보분석센터

주요국

1) 미국

◎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2024년 사회보장 장기 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75년간 사회보장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사회보장 프로그램 신탁 기금 잔액은 2034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

◎ 의회예산처, '2025년 연방 신용 프로그램 비용 추정' 보고서에서 연방정부 신용지원 아래 '25년 발행될 신규 대출과 대출 보증의 순 누적 비용(Lifetime costs)을 최대 652억 달러로 추산

2) 독일

◎ '25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기존 75억에서 40억 유로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며 재원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 대한 이자로 충당할 것을 발표

3) 일본

◎ 월례 경제보고각료회의에서 발표한 월례 경제보고에 따르면, 경제기조는 일부분 정체되었지만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발표

◎ 부처별 2025년도 예산 요구안 합산 총액이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인 117.6조엔 규모로 집계

4) 프랑스

◎ 사임한 프랑스 내각이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 한도를 올해와 비슷한 4,920억 유로로 동결 추진하여 논란 발생

5) 영국

◎ 지난달 초 출범한 스타머 정부는 "국가의 근본부터 고칠 것(Fixing the foundations of the country)"이라며 공공 재정 정책 방향을 공표

◎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대국민 TV 담화를 통해 "고통스러운 가을이 될 것"이라며 10월 있을 가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증세 예고

국제기구

1) IMF

◎ 유럽의 공공부채 증가세에 대한 전망, 과제 및 정책 대응에 대한 연구 발표

◎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부총재, 선진국 부채관리 필요성과 재정 지출 증가문제 해결 전략 제안

2) EU

◎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 EU 공통재정역량 촉구

주요국 월간 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수 지
미국 7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0개월 차)	규모	4조 846억 달러	5조 6,016억 달러	1조 5,170억 달러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10.7%	5.6%	-6.0%
독일 7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7개월 차)	규모	2,299억 유로	2,626억 유로	327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6.6%	-0.2%	-31.0%
일본 6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3개월 차)	규모	13조 6,673억 엔	35조 750억 엔	21조 4,077억 엔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	2.4%	-
프랑스 7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7개월 차)	규모	1,869억 유로	3,165억 유로	1,296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5.0%	-0.9%	-8.2%
영국 7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4개월 차)	규모	3,593억 파운드	4,107억 파운드	514억 파운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2.1%	1.7%	-1.0%

* 자료: 미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 July 2024(8.12. 발표)
일본) 재무성, 국고 세입세출 상황(8.20.발표). 일반회계 기준이며 수지는 공식발표치가 없어 세입-세출잔액으로 자체 계산한 수치임. 일본의 일반회계 수입은 공채(국채)연간 발행일정 및 이에 따른 수입변동으로 월별 변동이 큼.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중 괄호 내 수치는 공채금을 제외한 수입 기준임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verview of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and including July 2024(8.22. 발표)
프랑스)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1 juillet 2024(9.2.발표)
영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July 2024(8.21. 발표)

대한민국 7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7개월 차)	규모	357.2조 원	409.5조 원	52.3조 원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1.1%	4.7%	38.0%

미국

8.28.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2024년 사회보장 장기 전망' 보고서 발표[1]

-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기존의 혜택을 계속 보장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75년간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이 '24년 5.1%에서 '98년 6.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사회보장 프로그램 재원은 급여세(payroll taxes)와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es on benefits)로 자금을 조달하며 75년간 GDP대비 약 4.5%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 사회보장 프로그램 재정수입은 노령 및 유족보험(Old-Age and Survivor Insurance, OASI) 및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DI) 신탁 기금에 적립되며, 적립금은 '34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
-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34년 기금이 고갈된 후 사회보장 수입 규모에 맞추어 혜택을 축소할 경우 지급 총액은 기존 대비 23%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동 시나리오에 따르면 1970년생이 65세가 되는 '35년부터 혜택이 줄어들며 1970년대 이후 세대는 사회보장 혜택 수준이 이전 세대보다 낮아지는 최초의 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8.30. 의회예산처, '2025년 연방 신용 프로그램 비용 추정' 보고서 발표[2]

- 의회예산처는 연방정부의 신용지원으로 '25년 중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대출과 대출 보증 규모의 순 누적 비용(lifetime costs)을 추산
  - 누적 비용은 연방정부의 예상 현금 지출을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 산출한 현재가치(Present Value, PV)임
  - 누적 비용 추정법에는 공정가치 측정(Fair-Value)방식과 연방 신용 개혁법(Federal Credit Reform Act, FCRA)상 방식이 있음
- 공정가치 측정법과 연방 신용 개혁법에 따라 추정된 '25년 신규 대출과 대출 보증에 의한 연방정부 누적 비용 예측치는 각각 652억 달러, 24억 달러로 양자 간 큰 폭의 차이가 존재
  -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공정가치 측정법이 연방 신용 개혁법보다 더 포괄적인데,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국고채권(Treasury Securities) 발행의 시장 위험, 위험 프리미엄까지 모두 반영하기 때문
  - 공정가치 측정법은 페니 메이, 프레디 맥, 주택 및 도시 개발부 등에 대한 주택 보증이 조달 비용의 시장 위험까지 고려하면 비용이 크다고 평가하는 반면, 연방 신용 개혁법은 수익이 크다고 평가

1) https://www.cbo.gov/publication/60392
2) https://www.cbo.gov/publication/60682

독일

8.23. 독일 재무장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제한 방침을 밝히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주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 대한 이자로 충당할 것을 발표[3]

-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올해 75억 유로에서 내년에는 40억 유로로 대폭 축소할 예정
  - 이는 정부가 신규 부채 금액을 제한하는 채무 준칙을 준수하기 위해 예산을 긴축하고 있기 때문
  -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은 우-러 전쟁 발발 후 약 3,000억 달러규모의 국외 러시아 자산을 압류했으며 G7 정상회담에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이자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결정
  - 린드너 장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연방 예산에서 신규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이자를 사용함으로써 군사적으로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

일본

8.29. 각료회의에서 발표한 월례 경제보고에 따르면, 경제기조는 일부분 정체되었지만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발표[4]

- '24년 4~6월 민간소비지출, 민간기업설비, 민간주택, 정부소비지출이 기여해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8% 증가, 명목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8% 증가함
  - 실질 최종소비지출은 전기 대비 1%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임
  - 공공투자는 전월대비 수주액, 도급금액의 상승세와 2.2조엔의 추경예산 덕에 견조한 추이를 보임

9.4. 일본의 부처별 2025년도 예산 요구안 합산 총액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인 117.6조엔 규모로 집계[5]

- 연금·의료·간병 서비스 예산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과 방위성의 예산 요구안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서, 각각 34조엔과 8.5조엔 규모에 달함
  - 다만 2024년도 예산의 경우 요구안 집계시 114.4조엔이었다가 최종적으로는 112.6조엔으로 약 2조엔 감소한 바 있어 2025년도 본예산도 당초 집계치(117.6조엔) 보다는 감소할 전망
  -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및 통화긴축 기조를 반영하여, 2025년도 이자지출 금리 예상치도 현재의 1.9%에서 인상된 2.1%로 가정하여, 지출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
- 9월 말 이후 선출 예정인 신임 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 확대를 선택시 기초수지 흑자 전환이 현재의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
  - 집권 여당의 당 대표 경선이 9월 말 치러질 예정이며, 현직 후미다 기시오 총리는 재선 포기를 선언

3) https://www.euractiv.com/section/politics/news/germany-wont-provide-ukraine-with-fresh-money/
4)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actions/202408/29getsurei.html
5) https://mainichi.jp/english

프랑스

8.20. 조기 총선 결과로 사임한 프랑스 내각이 내년도 예산안 동결을 추진하여 논란 발생[6]

- **가브리엘 아탈(Gabriel Attal) 전 총리는 8월 20일 전 부처 장관에게 내년도 예산안의 한도를 알리는 서한을 보내 정부 지출을 올해와 비슷한 4,920억 유로로 동결한다고 통보**
  - 아탈 총리는 조기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7월 16일 사임하였으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차기 총리 임명 시까지 임시 정부 운영을 담당하던 중 부처별 예산 한도 통보 시한을 맞아 이같이 결정
  - 예산 규모 동결은 약 2%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약 100억 유로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어 국가의 적자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설명
- **그러나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우파 성향의 새 총리를 임명함에 따라 번복될 가능성이 높음**
  - 총선에서 승리한 좌파 진영은 정부 권한의 핵심 중 하나인 예산 편성권을 곧 떠날 인사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비판
  -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이 총리 후보로 내세우고 있는 루시 카스테트(Lucie Castets) 파리시 재정국장은 "현 상황에서 긴축 정책을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며 "이는 경제 논리에 따른 접근이 아니다"라고 지적
  - 한편, 26일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에서 1위를 한 좌파 연합의 총리 후보, 루시 카스테트를 공식적으로 총리 후보에서 배제한 데 이어, 9월 6일에는 공화당 소속의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를 신임 총리로 임명

영국

8.31. 총리실은 지난달 실시한 전 정권에 대한 재정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의 근본부터 고칠 것(fixing the foundations of the country)" 선언과 함께 임기 중 재정 정책 방향을 공표[7]

- **국가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부펀드(National Wealth Fund) 조성과 주택 건설 사업 가속화 및 철도법 제정을 통한 대영철도(Great British Railways) 설립**
  - 국영 투자 펀드로 경제 안정을 도모, 신성장 산업에 민간투자를 유도해 청정에너지 산업에 수천 개의 일자리 생성
  -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주택 시스템 개편, 향후 5년간 150만 개의 신규 주택건설을 목표
  - 철도 시스템의 개혁을 예고하며 철도법 제정을 통한 대영철도 설립 및 국유화를 선언
- **대영에너지(Great British Energy)를 설립해 영국 전역에 청정에너지와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올해의 집중 목표**
  - 풍력발전 등 청정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소유, 관리, 운영하는 국영 에너지 회사로 스코틀랜드에 본사를 두고 거대 석유 회사들로부터 걷은 횡재세(windfall tax)*로 운영될 것
  - 이는 영국의 에너지 독립 및 기후변화 대응, 국민의 에너지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

  * 영국은 고유가가 지속되던 지난 '22년 5월 에너지 이익 부담금(Energy Profits Levy, EPL)이라는 명목의 횡재세를 도입. 지난 7월 재무부는 올해 11월부터 석유가스회사에 대한 횡재세를 기존 35%에서 38%로 인상[8]
-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의 권한을 강화해 납세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새로운 법 제정으로 노동자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
  - 공공 재정을 무책임하게 남용할 수 없도록 예산책임청의 면밀한 검토 후 재정 조치(fiscal announcement)가 가능해질 것이며, 최소 임금 결정 때 생활물가(the cost of living)를 반영하도록 할 것

8.27. 신임 총리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10월 예정된 가을 예산안 편성 앞두고 증세 예고[9]

- **8월 31일의 공표에 앞서 지난 27일, 스타머 총리는 대국민 TV 담화를 통해 "이번 가을은 고통스러울 것"이라 언급하며 공공 재정 위기를 국민에게 함께 견뎌줄 것을 부탁**
  - 총리는 당선 후 전 정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공공부문 재정에 220억 파운드 규모의 '재정 구멍(black hole)'을 발견했으며, 국가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가을 예산 편성 시 증세와 지원비 감축*을 피할 수 없다고 발언

  * 지난 7월 29일 이와 관련, 영국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는 연금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겨울 연료비 지원 축소 등을 포함한 공공지출 삭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소득세나 국민 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총선 공약은 지키겠다고 강조하며, 10월에 예정된 예산안 발표 시 세부 사항을 공개할 것**
  - 영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자본소득세와 일부 상속세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



6)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1150000081?section=search
7) https://www.gov.uk/government/news/how-were-fixing-the-foundations-of-the-country
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july-statement-2024-changes-to-the-energy- oil-and-gas-profits-levy/changes-to-the-energy- oil-and-gas-profits-levy
9)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keir-starmers-speech-on-fixing-the-foundations-of-our-country-27-august-2024

IMF

8.23. 유럽의 공공부채 증가세에 대한 전망, 과제 및 정책 대응에 대한 연구 발표[10)]

- **공공 부채는 향후 선진 유럽국가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유지되지만, 신흥 유럽국가에서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정부의 자금 조달 요구는 여전히 높지만 주요 중앙 은행의 양적 완화 기조가 종료됨에 따라 자금 조달의 어려움 증대
  - 이 외에 전망에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방위, 기후 변화, 고령화로 인한 중요한 중장기 지출 압박도 존재
- **위험 증가에 직면한 정책 입안자는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재정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안**
  - 개혁된 EU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규칙을 준수하면서 10년이라는 종전보다 연장된 기간에 거쳐 부채 안정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 나갈 것을 제안
  - 이는 부채가 실제로 줄어들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줄 가능성이 높음

9.18.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부총재, 선진국 부채관리 필요성과 재정 지출 증가문제 해결 전략 제안[11)]

- **고피나스 부총재는 아일랜드 중앙은행에서 열린 강연에서, 현재 공공부채는 2030년 GDP대비 100% 규모가 예상되며 악화경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만큼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
  - 정치적인 지출 증가 선호와 증세 회피, 구조적인 인구고령화, 지정학적 위기, 기후변화 등이 지속적 부채증가 환경으로 작용
  - EU국가들의 중기재정계획상 부채 예측에 GDP대비 8~11%p의 낙관적 편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분석되어, 공공부채는 현재 예상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
- **재정지출 증가세 완화에 대한 전략으로서 친성장, 재정준칙, 시민참여 세 가지를 제시**
  - 지출 구조조정 중에도 성장 친화적인 공공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유럽의 경우 통신, 금융 분야 통합 진전 필요성을 제시
  - 재정준칙과 독립 재정위원회는 부채 증가에 대한 낙관적 편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을 공론화하는 노력도 필요

1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4/08/23/Taming-Public-Debt-in-Europe-Outlook-Challenges-and-Policy-Response-553526
1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4/09/17/sp091824-a-strategic-pivot-in-global-fiscal-policy

EU

8.21.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이자 전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 파비오 파네타(Fabio Panetta), EU의 공통 재정 역량 구축 제안[12)]

- **파네타는 '(EU의)통합 과정을 늦추는 민족주의적 충동'에 대해 경고하며, EU는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통 재정 역량"도 필요하다고 역설**
  - 이탈리아 리미니에서 열린 연례 가톨릭 정상회의에서 팬데믹에 대한 집단적 대응이 잠시 통합 추세를 늦추었을 뿐이라며 중장기적 투자 없이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
  - EU에 "공통 재정 역량"이 없다면 단일 통화 정책과 국가 차원에서 분산된 예산 정책이 특징인 현재의 유럽 거버넌스는 불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
  - 공통 재정 정책은 불균형을 바로잡고 회원국 간의 응집력을 강화하여 대규모 전략적 투자의 실현을 용이하게 할 것
- **노력을 집중해야 할 핵심 분야로 초국가적 공공재를 언급하였으며, '환경과 디지털의 이중 전환'과 '식량, 에너지, 건강, 방위와 같은 전략적 분야'를 제시**
  - 따라서 그는 '통신 및 에너지', '은행연합의 완성', '단일자본시장의 실현'과 같이 현재 배제된 부문으로 단일 시장을 확대할 것을 촉구



12) https://www.euractiv.com/section/economy-jobs/news/italian-central-bank-chief-calls-for-a-common-eu-fiscal-capacity/



정부지출은 왜 증가하는가?

옥동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전)조세재정연구원장, dsoak@naver.com

19세기 유럽국가들이 재산의 사적 소유 이념을 채택하면서 민간부문은 부르주아 계급과 함께 급성장하였다. 점차 산업화가 확대 심화하면서 정부와 공공부문의 규모도 더불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근대화란 개인 활동의 근거가 신분제에서 자발적 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왜 강제적 성격의 국가활동이(또는 정부활동) 증가하는가? 이 질문은 19세기 독일의 저명한 이론가 아돌프 바그너(Adolf Wagner)가 제기한 이래 현재까지 약 150여 년 간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흥미로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 논쟁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낸 이론들은 1883년 바그너의 '정부지출 확대의 법칙', 1961년 피콕-와이즈만의 '변위효과', 1967년 그의 이름을 딴 '보몰 효과', 그리고 1970년대 이후 뷰캐넌으로 대표되는 '공공선택'과 이에 기초한 은유적 표현인 '재정 공유지'로 압축될 수 있다. 이들 이론의 발전은 각 시대에서 정부지출 증가에 영향을 준 핵심 변수들을 부각하는 것이긴 하지만, 오랜 역사적 경험과 사고의 진화를 통해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추출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그너의 '정부지출 확대의 법칙'

150여 년 전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아돌프 바그너는 '진보적인' 국가의 불가피한 특징으로서 정부활동과 지출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상을 '국가지출 확대의 법칙'으로 공식화하였다.[1] 이를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산업화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민간부문 대비 공공부문의 상대적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바그너의 이러한 주장은 정부지출의 규범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대륙의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국가활동 증가의] 법칙은 진보적인 국가, 적어도 서유럽 문명에 대한 경험적 관찰의 결과이다. 그 설명, 정당성 및 원인은 사회적 진보의 압력이며 그에 따라 민간 및 공공경제, 특히 강제적인 공공경제 영역의 상대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재정적인 한계는 국가활동의 확장을 방해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일반적으로 수입에 의해, 그 반대가 아닌, 결정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들은 진보적인 국민의 발전에 대한 열망으로 언제나 극복될 것이다."[2]

바그너는 이러한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3] 첫째, 산업화와 함께 노동분업이 확대됨에 따라 법적 관계와 의사소통이 복잡해지면서 정부의 법적 행정적 규제와 보호기능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난다. 특히 산업화로 인구가 밀집되는 도시화가 진전되며 사회적 갈등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적 해결은 공적 해결로 대체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 문화, 소득재분배 등 공공서비스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우등재이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공공지출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발전으로 인해 필요한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대규모 민간독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이들은 국가에 의해 해체되거나 국가독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20세기에 들어와 많은 경제학자들은 바그너의 법칙에 대해 "대부분의 경험적 증거는 바그너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4] 물론 산업화 초기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횡단면 분석과 시계열 분석 모두에서 그의 법칙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유력한 재정학자 머스그레이브(Richard A. Musgrave)는 정부지출 증가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

1) 바그너는 1863년부터 50년에 걸쳐 많은 독일어 출판물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영어로는 1883년 논문의 간략한 구절들만 Musgrave, Richard A. and Alan T. Peacock(eds.)(1958), *Classics in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pp. 1-8에서 엿볼 수 있다. 바그너의 "법칙"을 자세히 설명한 영어 논문은 Bird, Richard M.(1971), "Wagner's "Law" of Expanding State Activity," *Public Finance*, Vol. 26, No.1, pp.1~26 참조.

2) Musgrave and Peacock(1958)에 수록된 Wagner, Adolph(1883), "Three Extracts on Public Finance," p.8 참조.

3) Bird(1971), pp. 2~3 참조.

4) Bird(1971), p.25 참조.

분석을 통해, "지출증가 이론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다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경제적 요인들만 고려하더라도 지출의 법칙에 도달하기 어렵다. 열등재는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예외적이고, … GNP대비 지출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 (지출의) 세분화가 필요하기에 … 총량적인 추세는 의심스럽다."[5]

바그너의 법칙에 대한 또 다른 심각한 비판은 이것이 실증적 이론이 아니라 오히려 철학적이고 사변적(思辨)이라는 것이다. 법칙에 대한 그의 설명은 국가와 국가 활동의 본질에 관한 그 자신의 규범적 가치와 얽히며, 경제가 산업화됨에 따라 정부활동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바그너는 국가를 그 자신의 취향과 선호를 가진 존재, 즉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과는 다른 '일반의지(general will)'를 가진 상위의 인격인 '국가 유기체'로서 인식했다. "이는 어떤 이유로든, 무엇을 해야 할지 궁극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인간들로부터 관심을 돌리는 나쁜 효과를 가진다."[6]

피콕-와이즈만의 '변위효과'와 '집중화'

20세기에 들어와 한계혁명의 영향으로 1950~1960년대 경제학에서는 수리적 모형과 분석이 극도로 발전하였다. 이 당시에 수립된 경제모형들에서는 정부지출이 외생적으로 취급되거나, 또는 정부가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해 조세와 정부지출을 최적 선택하는 주체로 상정되었다. 1961년 피콕(Alan T. Peacock)과 와이즈만(Jack Wiseman)은 이들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지출 활동을 설명하는 가설들을 개발하고자 1890년 이후 영국 정부의 지출 통계와 행태를 분석하였다.[7]

이들은 정부지출 결정에 대해 두 가지 흥미로운 가설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후 기간에 국방비 이외의 지출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변위(變位)효과(displacement effect)'라고 불렀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확대는 일반 대중이 허용할 수 있는 과세 수준에 따라 제한된다. 그런데 전쟁과 같은 대규모 사회적 교란이 나타나면 이러한 허용 한도가 변경되고, 경제는 이전에 허용했던 수준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능히 감당한다. 사회적 격변기에 수행했던 정부기능들의 여파, 그리고 일반 대중의 사고가 변화하며 정부에 새롭고 중대한 의무들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변위효과와 함께 '집중화(concentration process)'라 불리는 또 다른 가설도 제시하였다. 이는 공공지출 총액의 변화보다는 각종 지출에 대한 책임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많은 사회에서 정부의 기능은 중앙 당국과 여타 당국(주 및 지방) 사이에 공유되는데, 여타 당국의 권력은 법률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다. 그런데 경제발전에 따라 정부부문에서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규모는 증가하고, 또 더 넓은 지리적 영역에서 공공서비스의 평등 처우에 대한 요구가 나타난다. 이들 압력들은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수행되는 지출의 상대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는 정상적인 시기에서도 작용하지만 혼란한 '변위'의 기간에 '집중화'가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피콕-와이즈만 가설은 바그너의 법칙에 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진전된 것이다. 첫째, 바그너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에 8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기에 공공지출에 미치는 전쟁의 영향을 특별히 고려할 수 없었다. 둘째, 바그너 자신은 비록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들은 진보적인 국민의 발전에 대한 열망으로 언제나 극복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지만 수입 증대의 가능성에 의해 지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출의 확대 가능성은 본질적으로 수입에 의해 제한되며 그 수입은 전쟁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결국 피콕-와이즈만의 제안은 일반 대중들의 정치적 인식이(세금 및 지출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 정책 결정에 대한 이들 태도의 영향 등)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었다.[8]

보몰의 '보몰 효과'

'보몰 효과'는 1965년 보몰(William J. Baumol)과 보웬(William G. Bowen)이 베토벤 현악 4중주곡을 위한 연주자 수가 19세기 연주와 동일하다는, 즉 클래식 연주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공연의 비용 또는 가격이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다.[9] 경제 내 산업은 노동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을 대별할 수 있는데,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산업에서는 임금이 증가하고 또 노동자들의 산업간 이동이 유연할 때 노동생산성이 정체된 산업에서의 인건비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 산업에서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임금이 증가하고 또 노동자들이 자동차 산업과 여타 서비스업 -의료, 교육, 예술 및 문화- 사이를 자유로이 이동가능하다면, 이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도 같이 증가하여 당해 서비스의 총비용이 증가한다.

5) Musgrave, Richard A.(1969), Fiscal Systems, p.122 참조.
6) Bird(1971), p.3 참조.
7) Peacock, Alan T. and Jack Wiseman(1961), *The Growth of Public Expenditure in the United Kingdom*, Princeton University Press 참조.
8) Bird(1971), pp.14 참조.
9) Baumol, William J. and William G. Bowen(1965), "On the Performing Arts: The Anatomy of Their Economic Problem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5, No.1/2, pp.495~502 참조.

경제내 한 부문의 노동시간당 생산성이 다른 부문의 성장률에 비해 누적적으로 증가한다면, 물론 임금은 모든 부문에서 비례적으로 상승하지만, 비진보적 부문들의 상대적 비용은 필연적으로 상승해야 하며 또 이러한 비용들은 무한히 누적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진보적 부문의 생산성 증가는 임금 인상을 상쇄하겠지만, 비진보적 부문에서는 이러한 상쇄가 더 작을 수밖에 없다. … 따라서 기술적으로 진보적인 부문들의 발전 자체는 필연적으로 경제 내에서 기술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문들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물론 이들 지역 내에서의 노동시장이 어쨌거나 봉쇄될 수 없고 또 임금이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렇다는 것이다.[10]

이러한 '보몰 효과'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면 공공부문 지출증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11] 교육, 경찰, 병원, 사회복지 등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가 높지 않은 부문에 속한다. 만약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생산성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공공부문 서비스에 대한 총지출은 국민총생산 대비 증가할 것이다. 보몰의 이러한 주장은 정부지출의 부문별로 실증되어야 하기에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그 중심적인 명제는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부의 비용증가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뷰캐넌의 공공선택론

정부지출의 규모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현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1986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캐넌(James M. Buchanan)으로 대표되는 공공선택론자들이다. 이들은 정치인들도 경제행위에서처럼 자기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치적 현상들을 설명하였고, 또 이들이 과연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는지 여부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들은 재정과정을 정치적 선택으로 보면서 정치과정 또는 유효한 정치적 의사결정 규칙에 대한 분석 없이는 정부지출 변화의 핵심 요인을 추출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12]

공공선택론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적 선택을 민간부문의 시장선택과 대조하면서 그 핵심적 특징을 추출하였다. 우선 공공서비스는 개인에게 제공될 때 직접적으로 가격이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비용 충당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이들 서비스의 편익 수취와 분리될

10) William J. Baumol(1967),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7, pp.419~420 참조.

11) William J. Baumol(1967) 참조.

12) Buchanan, James M. and Marilyn Flowers(1987), *The Public Finances*, sixth edition, pp.131~140 참조.



수밖에 없다. 반면, 민간경제에서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령은 시장교환으로서 대가 지급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에 개인들은 그 대가를 완전히 인식하며 자신의 소비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특정한 정부지출 사업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세금부담 몫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그 몫에 따라 자신의 소비 규모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당선에 사활을 걸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무엇이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그들은 선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세와 정부지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정부 지출,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부담을 지우는 조세개편은 득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특정 집단, 특정 지역에 차별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정부 지출과 조세개편이 득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더구나 다수결 투표 제도 자체는 보편적 편익의 정부사업에 불리하고 차별적 편익의 정부사업에 유리한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13]

더구나 정부는 국채발행, 통화증발의 권한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저항에 직면하는 조세부담과 달리 국채발행과 통화증발에 따른 부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국채발행과 통화증발의 누적은 인플레이션과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을

13) 차별적 편익은 투표행동을 하는 적극적 지지층을 형성하지만 보편적 편익은 무임승차의 기대로 적극적 투표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초래- 나타나는 것이기에 정치인들은 단기적 현안에 매몰되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재정준칙이 -수지균형 등의 제약- 없는 경우 정치인들은 정부지출에 대해 상당히 확장적인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인-대리인'과 '재정 공유지'의 문제

2008년 폰 하겐(von Hagen)은 공공선택론의 장황한 설명들을 '불완전계약의 본인-대리인' 문제와 '재정 공유지'의 문제로 압축 표현하였다.[14] 첫 번째 문제는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들이 공공지출과 조세에 대한 권한을 정치인들에게 위임하면서도 유권자(본인)와 정치인(대리인) 사이에 아무런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인에게 임기응변적 재량적 권한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불완전계약'으로부터 정치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진 대리인들이(정치인들이) 선출되고 있는가가 정치과정의 핵심 문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의 '재정 공유지' 문제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돈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특정한 집단이 차별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그 부담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귀속시키는 현상을 우리는 '공유지'라고 부른다. 만약 공동체 내에서 공유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칙과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유지는 필연적으로 황폐화하는 '비극'이 발생할 것이다.

공유지 문제는 정치인들이 특정한 공공정책에 대해 일반적인 조세자금의 금전을 지출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 특정한 목표 정책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집단이(일반적인 납세자) 그 혜택을 받는 집단보다 더 크다는 사실은, 특정 집단에 귀속되는 순편익과 사회 전체의 순편익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괴리는 특정 집단과 이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책에 대해 사회 전체의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공유지 문제는 공공지출의 과도한 수준으로 이어진다. 이 논리를 동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과도한 적자와 정부채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15]

14) von Hagen, Jürgen(2008), "Political Economy of Fiscal Institutions," Chapter 26, *The Oxford Handbooks of Political Economy*, eds. by Barry R. Weingast and Donald A. Wittma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464~478. 재정 공유지라는 용어는 von Hagen, Jürgen and Ian Harden(1996), "Budget Processes and Commitment to Fiscal Discipline," IMF Working Paper, WP/96/78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15) von Hagen(2008), p.465 참조.



본인-대리인 문제와 공유지 문제의 부정적인 결과들은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제도들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폰 하겐은 이들을 ①적자, 지출 또는 조세에 대한 헌법적 제한 등과 같은 사전적 재정준칙, ②정치적 책임과 경쟁을 촉진하는 선거 규칙들, ③예산과정의 절차적 규칙들로 정리하였다. 이들 제도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OECD와 개발도상국들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들에 의하면 적절한 규칙과 절차를 구비한 국가에서는, '재정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부지출 확대의 법칙은 존재할 수 없고, 초원 등 여느 공유지처럼, 개별 국가의 대응에 따라 재정 공유지의 '지속가능성'이 좌우된다는 사실만이 만고불변의 법칙이 될 것이다.

민자유치제도 30년의 명암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금년으로 민자유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SOC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민간의 자금과 효율을 활용한다는 목적 하에 1994년에 민자유치제도를 도입했다. 94년 이전까지는 항만법이나 도로법 등에 근거해서 일관성이 없이 추진되던 민자사업이 하나의 법률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무렵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어떠 했을까.
80년대 우리 경제는 연간 9% 수준의 고도성장을 해왔으나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의 SOC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도로교통 혼잡으로 연간 8조 6천억 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었다.
1985년에 100만 대에 불과하던 등록차량이 10년 만에 800만 대로 늘어 났고 2001년에는 1700만 대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절이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등록차량은 2,500만 대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그런데 당시 도로사정은 선진국의 20-50%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했다. 그러다보니 기업의 물류비는 94년에 총 43조 원으로 총매출액에서 1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11%)이나 미국(7%)에 비하면 2배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도로 뿐만 아니라 항만·철도 등도 모두 포화 상태였다. SOC 전체로 보면 시설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SOC 문제를 해결할 타스크 포스 형태의 기구를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했다. 이 조직이 바로 1991년경 설치된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단장 이석채)이다. 기획단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우리나라 SOC 발전에 획기적인 두 가지 조치를 하게 된다.
민자유치제도의 도입과 교통세 신설이 그것이다.
모두 1994년에 도입 되었는데 SOC 투자 재원의 마련과 SOC 투자제도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당시에 대단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목적세를 하나 신설 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교통세는 도로·지하철·고속철도·공항 등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오늘날 이것의 세수는 연간 11조 원에 이른다. 2024년도 우리나라 SOC 예산이 26조 원 수준이니 작은 돈이 아니다. 교통세가 생긴 이후에 인천국제공항(2001), 경부고속철도(2004) 등이 건설되었다.
교통세와 함께 SOC 확충에 기여한 것은 민자유치제도였다.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2년까지 민자협약이 되어 진행된 사업은 총 818건, 137조 원에 달한다. 정부 예산만으로는 SOC를 조기에 확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가뭄에 단비와 같았다.
민자유치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별로 없었다. 해외에서 오래 근무했던 건설사 임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대표적으로 민자가 활발했던 영국이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영국은 이미 민관파트너십(Private Public Partnership)이라는 명칭으로 민자를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였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법')이 제정 되면서 우리나라 SOC 건설은

한 획이 그어지게 된다.(제2기)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초기에는 정부가 고시한 사업을 대상로 한 수익형투자사업(BTO)이 주를 이루었다. 1995년부터 1998년 까지는 대략 1-2조 원 규모의 협약이 이루어지는데 그쳤다.
대개 SOC 사업은 규모가 크고 방대하여 투자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수요예측도 불확실하여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다. 초기 민자사업은 대상사업을 일부에 한정 한데다 추진 경험도 부족했고 외환위기 까지 겹쳐서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9년 '민자유치' 대신에 '민간투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솔깃할 만한 대책을 내 놓는다.(제3기)
소위 1999년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도입 하는 한편 민간도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추진방식도 다양화하여 BTO 중심에서 BOO(소유형민투사업), BOT 등을 추가하고 민간추진지원센터(PICKO)를 설립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 실적이 연 12조 원 까지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였지만 재정에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MRG는 통행량 등의 예측치와 실적치간의 차이로 실제수입이 약정된 수입 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80-90%를 정부가 보장해 주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걱정거리가 거의 없어지는 반면에 정부로서는 그런 사업이 많아질수록 재정운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제도를 2009년에 완전히 폐지하고 만다. 그러나 폐지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2010년 이후 2021년까지 정부(중앙+지방)가 이들 민자 사업자에 보전한 지출은 총 6조 7,496억 원에 이른다. '혈세 먹는 하마', '밑 빠진 독'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연도	관련법	법과 지침상 내용
제1기	개별법 (1968-1994)	도로법, 항만법에 따라 간헐 추진
제2기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유치 촉진법 (1994-1998)	민자대상 및 절차 SOC 중 정부고시사업, BTO· BOO
제3기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법 (1999-2004)	MRG 제도 도입('99) 민간제안사업 추가, BOT 추가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설립
제4기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2005-현재)	SOC ···› 교육문화 시설로 확대 임대형민간투자(BTL) 도입('05) MRG폐지, 최소비용보전제도(MCC) 대상사업: 열거주의 ···› 포괄주의('20)

2005년에 이르러 정부는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제4기)
법 명칭을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이라 바꾸고 SOC 시설 위주에서 학교, 청사, 도서관, 기숙사 등 교육문화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시설도 그동안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어 거의 모든 SOC 시설을 포함 시킨다. 사업추진 방식도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민자적격성심사 제도를 통해 무분별 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MRG를 대체하는 최소비용보전제도(MCC)를 도입하여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러나 MRG에서 MCC로 바뀌었는데도



정부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의 경우가 그렇다. 이 사업은 대표적인 MRG 대상으로서 2016년부터 MCC사업으로 재구조화 하였으나 정부보전분이 여전히 막대하다. 민투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최근 민자사업 규모는 연 2조 원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

인천공항철도의 MRG에서 MCC로 변경 후 보전비용 비교

MRG 지급액 (2009-2015)	MCC 지급액 (2016-2021)	총계 (2009-2021)
1조3,525억 원	2조671억 원	3조4,196억 원

지난 30년을 돌이켜 보면 민간투자제도가 SOC 시설의 조기 확충 등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15%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높은 이용료나 사용료 부담을 안기고 정부 쪽에는 MRG 라는 막대한 지출 부담을 안겼다. 지금에 와서 우리는 민자투자제도의 효용성에 대해 냉정한 반성과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해졌다. 기업들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 대규모 유보금을 잠가 놓고 있다.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SOC 시설도 확충 하면서 민간의 대규모 유보자금에 대한 투자처도 고려해야 한다. 실물과 금융이 같이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 바람직 한 것이 아닐까.
우선 인구감소에 맞추어 민자사업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미연에 부실을 막아야 한다. 수익률은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민자업체의 운영비 효율화를 위해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엔비디아 젠슨 황에게 배우는 회복탄력성

조원경 UNIST 교수



우리는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동한다. 힘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숨겨진 비법으로서, 회복탄력성(회복력)이란 개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힘'이란 뜻의 회복탄력성은 심리학에선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한다. 같은 강도의 시련이라도 어떤 사람은 금방 털고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충격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며 힘들어한다. 우리 몸에 근육이 많을수록 위험한 상황에서 더 안전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지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이 증가하면 스트레스와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도 그만큼 증가한다. 여기에서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고금리와 높은 물가 상승 속에 많은 이들은 경제 한파 속에서 힘들어했다. 자본주의 역사는 100번 넘는 위기를 겪었지만, 위기를 돌파하고 전진했다.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회복탄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복탄력성을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충격 이전의 장기적 성장 추세로 복귀하는 총체적 역량을 말한다. 회복탄력성은 흔히 갈대에 비유한다. 갈대는 충격에 견디는 힘은 약하나, 충격을 흡수해 원 상태를 회복하는 데 탁월하다.

한파에서도 꽃피는 춘삼월을 준비하는 자는 꿋꿋한 DNA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상이 어렵다고 비관만 해서야 되겠나! 위기일수록 자신을 스스로 돕는 것이 간절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기 시에 회복탄력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창조적 파괴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내적 외적 충격으로 인해 위기에 닥치면 기존 시스템은 더 유지할 수 없다. 이때야말로 창조적 파괴를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기존 시스템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혁신적인 대안을 만들어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은 모교인 스탠퍼드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기대치가 매우 낮다는 것이라 했다. 현실적인 목표와 가능한 일을 대상으로 하면서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내고자 하는 그의 인성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반대로 그는 스탠퍼드 졸업생들은 기대치가 매우 높아 쉽게 좌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젠슨 황은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그런 역경을 이겨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이런 의미 있는 말도 덧붙였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격을 연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위대함을 원합니다. 위대함은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옵니다. 인격은 똑똑한 사람에게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형성됩니다. 스탠퍼드 학생 여러분, 많은 고생을 하시길 바랍니다."

① 낮은 기대치 → ② 좌절 → ③ 회복탄력성 → (①~③ 반복) → 위대함

일단 기대치를 낮추고 목표하는 바를 빨리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의 말이 의미 있게 들린다. 학벌이 높은 사람은 기대 수준도 높지만, 뜻하지 않은 대로 일이 잘못되면 쉽게 좌절한다. 그의 말처럼 회복탄력성은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는 힘이라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젠슨 황의 말에서 보듯이 회복탄력성의 첫 메시지는 자기 긍정성이다. 경제도 인간의 삶에도 자기 긍정성이 중요하다. 자기 긍정성은 선순환을 통해 모든 면에서 강한 회복탄력성을 갖게 해준다. 젠슨 황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에 대한 긍지를 잃지 않았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일방적 희생이나 이기심을 넘어서 진정한 주체성을 발현하는 태도이다. 그는 항상 삶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가졌다고 한다.

'새로운 고생살이, 거기엔 무엇인가가 있어.'

세계적 경제 석학이자 프린스턴대 교수인 마커스 브루너마이어는 〈회복탄력 사회〉에서 젠슨 황 같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이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마커스 교수는 우리가 그간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지나치게 '견고성'에 집착하려는 태도를 보여준 것에 반대한다. 그의 '떡갈나무와 갈대' 비유를 통해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자. 견고함의 대명사인 떡갈나무는 웬만한 비바람이나 강풍도 견뎌낸다. 하지만 정작 태풍 같은 거센 충격에 직면하면 부러진다. 갈대는 어떤가? 가벼운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태풍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속성이 있다. 떡갈나무의 견고성보다는 갈대의 회복탄력성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갈대 같은 원상 복귀 능력을 중시할 때 우리는 삶과 경제의 '안정성' 이상을 생각하게 된다. 안정성은 주로 일상적이고 사소한 충격에 국한되지만, 회복탄력성은 견고성의 벽을 뚫고 들어오는 충격도 받아들인다. 때로는 위기를 아예 회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위기를 감내하는 편이 낫다. 위기는 평소에 필요하던 혁신을 실행에 옮길 기회이기 때문이다. 혁신이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균형이 누적되고 그만큼 위기는 더 심각해진다. 그 반면에 소소한 위기에도 회복탄력성이 좋다면 기업이나 사회는 한층 강화되고 튼튼해진다. 이런 현상을 '변동성 역설'이라고 일컫는다. 삶과 경제는 어쩌면 변동성이 매우 낮은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 때가 오히려 조심해야 할 때란 것이다.

자기 긍정성과 함께 중요한 것은 현실 긍정성이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살아야 할 굳건한 이유와 삶에 대한 확신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자기 암시를 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든다. 젠슨 황이 낯선 미국에서 어린 시절 갖은 고생을 하며 데니스 레스토랑에서 설거지한 것까지 자기 삶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현실에 긍정적인지를 말해준다.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상황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자기조절능력은 자기 이해와 자기 충동 통제를 전제로 한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뛰어난 사회성을 가진 경우가 많다. 감성이 풍부하고 격정적이며 자유로운 천성과 극단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철저한 도덕의식을 지닌 인물이 많다.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 역시 뛰어나다. 이런 회복탄력성이 젠슨 황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엔비디아를 성공적으로 이끈 덕목이고 혁신과 자기 계발의 원천이 되었다.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도서 추천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시각을 책을 통해 배워보자.

세계 경제 패권을 향한 환율전쟁



왕양(지음) ● 평단(펴냄)

한 나라의 경제와 부(富)를 좌우하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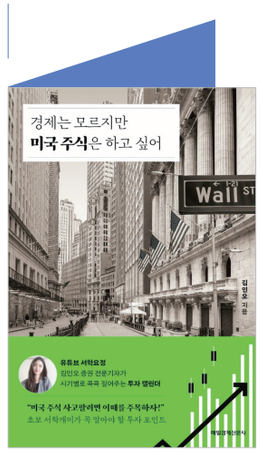
「환율전쟁」에서 저자는 환율이 무엇이고 환율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환율전쟁이 왜 소리 없는 부 쟁탈전인지 분석하면서 중국의 남송 때 벌어진 첫 번째 환율전쟁을 정리한다. 남송과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금나라는 지폐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지폐 발행을 남발해 인플레이션에 빠진다. 그 결과 금나라 후기에 지폐가 지나치게 많이 유통되어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은자와 동전을 사용하는 백성은 되도록 지폐를 거부했고, 심지어 재산을 남송으로 옮겨 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금나라가 지폐를 발행할수록 심화되었고, 마침내 남송으로 자산을 옮겨 놓으면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안전하다는 환율전쟁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양국 사이에 비의도적인 환율전쟁이 일어났다. 금나라는 경제가 붕괴함에 따라 국가 내부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결국 몽골에 멸망했다.

환율전쟁의 근대사에는 미국이 등장한다. 양차 세계대전 속에서 금본위제가 무너지면서 달러가 글로벌 기축통화로 올라섰고, 경제패권을 넘겨받은 미국은 세계 경제를 휘어잡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었다. 이런 미국도 무역적자가 계속되자 각자도생의 길을 찾았고 첫 번째 희생자가 미국의 동맹 일본이었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주도하던 일본은 경제에 낀 거품이 터지면서 20년이 넘게 불황의 늪을 헤매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일본의 경제 붕괴 배후에 미국의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 일본의 경제 붕괴는 정말 미국이 주도한 일일까? 그렇다면 영국의 파운드화 붕괴, 라틴아메리카의 주기적 파산, 아시아의 금융위기, 러시아의 루블화 붕괴는 왜 일어났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 책을 보며 풀어낼 수 있다.

책 속으로

일본의 버블 붕괴 결과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막대한 부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는데, 1제곱미터당 100만 달러에 달하던 긴자의 부동산 가격은 2004년에 이르러 원래 가격의 1% 수준도 안 되는, 즉 만 달러 밑으로 추락했다. 버블이 비교적 덜 심했던 주택의 가격도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많은 일본 기업과 투자자들은 가격이 상승하는 단계에서 과도하게 투자한 탓에 버블 붕괴 이후 막대한 채무를 짊어지게 되었다.

경제는 모르지만 미국 주식은 하고 싶어



김인오(지음) ● 매일경제신문사(펴냄)

책 속으로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면 24일 애프터마켓에서 15% 내려간 가격으로 메타 주식을 사면 됐다?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정확히 저점에 매수하는 일은 많지 않다. 심리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미 메타를 가진 사람이 애프터마켓에서 주식을 헐값에 내다 팔 가능성이 더 높다. 반대로 내가 메타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24일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걸 보고 불안에 휩싸인 나머지 15% 급락한 수준에서 매도했다고 생각해 보자. 다음 날인 25일 본 거래에서 낙폭은 오히려 11% 정도로 적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현실적 고민

우리 사회에서 20~40대 회사원 월급은 대부분 세후 200~500만 원 범위에 걸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 나이대에는 아직 1억 원도 모으지 못했는데 결혼 혹은 내 집 장만, 이사, 퇴사 후 다른 인생 찾기 등등 인생의 중요한 변수들이 툭툭 튀어나와 목돈을 요구한다. 하지만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느라 주식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을 핑계라고 할 수 있을까?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스스로를 돌보는 일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금융 업계 종사자가 아닌 한 각자의 삶을 꾸려야 한다.

『경제는 모르지만 미국 주식은 하고 싶어』에는 대한민국 젊은이의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있다. 주변에서는 "한국 주식 하는 거 아니래, 미국 주식 해야 돈 번대"라며 재테크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영어를 못한다고, 경제를 모른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마음먹으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알아봐야 할 것들이 다르기도 하다.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

하지만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은 정해져 있다. 어려운 경제 용어, 기업의 재무제표를 몰라도 이 책만 참고하면 충분히 미국 주식에 도전할 수 있다. 저자는 유튜브에서 서학 요정으로 인기 있는 증권 전문기자이지만 평범한 월급쟁이 직장인 투자자이기도 하다. 일반 직장인의 입장에서 미국 주식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엄선해 책에 담았다.

세상에는 저마다 서로 다른 성공담이 있다. 투자는 철저히 현실이자 실전일 뿐이다. 미국 주식 어떤 종목을 사둘지, 또 언제 사서 팔면 좋을지는 공부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 나만의 원칙과 기준을 따랐을 때 실제 수익이 생긴다. 이 책은 초보 투자자가 공포감에 휩싸여 실수로 매매하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가는 작업을 돕는다.

『경제는 모르지만 미국 주식은 하고 싶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투자법과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SEPTEMBER

2024

9

경 제

- 한국은행 2024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국 제

- OECD 중간경제전망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025년 예산안 발표 (기획재정부, 8.27.)

- 총지출 규모는 677.4조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2% 증가
-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4대 중점분야(약자복지 강화,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에 집중 투자
- 건전재정을 위해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대 중반, 국가채무 비율은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한국은행, 8.22.)

- (국내) 올해 성장률은 2.4%로 5월 전망(2.5%) 대비 하향 조정, 내년 성장률은 5월 전망에 부합하는 2.1%로 예상, 경제는 향후 수출 증가세 지속되며 소비 회복 속도 빨라질 전망
-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은 2.5%로 0.1%p 하향 조정, 농산물가격상승률의 둔화로 내년에는 연초 전망 2.1%로 부합 예상, 근원물가는 2.2%로 유지

1월

재정
- 2025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23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
- 통계청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Economic Outlook update)발표

2월

재정
- 2023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3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 (Interim Economic Outlook)발표

3월

재정
-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4월

재정
- 2023년 결산 검사 의뢰 (기획재정부 → 감사원)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Economic Outlook)발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5월

재정
-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2025년 예산요구서 제출(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23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3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23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경제
- 통계청 2024년 1/4분기지역경제동향 발표
- 통계청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6월

경제
- 한국은행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2000~23년)
- 한국은행 202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통계청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7월

재정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 발표
- 통계청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Economic Outlook update)발표

8월

재정
- 2025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통계청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9월

재정
- 2025년 예산안 제출(정부 → 국회)
-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0월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Economic Outlook)발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11월

경제
- 통계청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2월

재정
- 2025년 예산 확정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을 즐겁게 읽으셨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페이지의 간단한 느낌을 적어
애독자 퀴즈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애독자 QUIZ

문제 2025년 예산안은 4대 투자 중점을 설정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 등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2025년 예산안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답

지난 호 정답 :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

지난 호 이벤트 당첨자

010-****-*426
010-****-*867
010-****-*090
010-****-*422
010-****-*405

애독자 퀴즈 정답 & 독자편지 보내주실 곳

★응모기간 2024.9.25.~10.15.

QR 코드로 접속해
응모해 주세요.

찾아라! 올여름 최고의 센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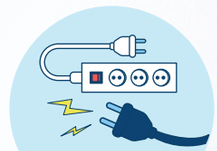
에너지센스,
우리 모두
함께 해볼까요!




냉방 할 때는
문을 꼭 닫기!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도 준수하기!


안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

온도주의

PROUD MEMBER OF
ENERGY SENSE CAMPAIGN



FIS 한국재정정보원 | (04637)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Tel. 02-6908-8200 Fax 02-2288-6200 www.fis.kr

09
9 772508 897000
ISSN 2508-8971